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 남북경협 발전방향

김 규 룬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장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이하 경공위)가 2007년 12월 4일에서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남측에서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북측에서는 전승훈 내각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전체회의 2회와 위원장 및 위원급 접촉, 분야별 실무접촉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큰 틀에서의 남북 공동번영 문제를 논의하고 제10조 제19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측은 경공위 위원을 통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본부장과 실장급으로 구성함으로써, 11월에 개최된 남북총리회담 대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구성하였던 것과 차별화된 남북경제협력 실천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경공위 위원을 백룡천 내각 사무국 부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 철도성 국장, 박철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북측의 위원 명단 중 4명(백룡천, 박호영, 차선모, 박정성)은 11월에 개최된 남북총리회담 대표로도 참석하였던 인물이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경공위 위원 구성은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북측에 남측을 대상으로 회담을 수행할 부문별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공위 합의사항은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6개 분과위원회 개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하자원개발 분과위원회」 및 「경제제도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제1차 경공위는 남북경협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실천적 협의체계를 보다 실질화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경공위 산하 분과위의 일정을 확정하여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협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공위 합의서 제8조에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함으로써, 북측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포괄적 이해를 공유한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그러나 회담 초반에 제기되었던 3통 문제의 해결은 북측이 군사적 합의를 전제로 한 문제라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획기적 진전을 보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지속된 남북 당국간 회담과 실무접촉 및 현지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남북경협이 과거와 달리 본격적으로 대규모화된 형태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제기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 및 대북한 지원사업과 정상선언 합의사업 이행과 정과의 정합성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남과 북은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20여 년간 경제협력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수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남과 북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해 온 바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란 남한의 기업뿐 아니라 각종 공사 및 NGO와 각종 경제단체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이 그 동안 행하였던 수많은 대북사업들에서 얻은 경험은 향후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거버넌스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당국간 회담에서는 남과 북의 경제주체들이 경제 논리에 의거해서 상호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완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질적 남북경협은 축적된 경험을 구비한 남북경협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은 남북경협 본격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양성해야 할 것이다. 금번 경공위에 북측이 총리회담 대표들을 다시 선정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는 남한과의 경제회담에 나올 수 있는 경제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한은 선진적 경제운영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부처에 많이 있지만, 북측의 경제상황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한은 우선적으로 기존 남북회담 및 남북경협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종합발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측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기구와 공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은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수많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과 북의 경협사업은 언뜻 보기에는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남과 북이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많은 경협사업을 지장없이 추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경협이 대규모화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대규모화는 필연적으로 주변국가와의 협력문제와 연결될 것이므로, 남과 북은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남북경협을 발전시키는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대규모화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받게 될 수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과 재원조달 방안을 동원해서 남북경협이 확대되도록 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의 순조로운 개최 분위기를 이어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남과 북이 경추위를 경공위로 격상시킨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남과 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를 남과 북의 경제협력 확대에 있다고 본 것이다. 남과 북은 합의한 경협 사업들이 향후에 무산되거나 동력을 잃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향후 추진될 남북회담은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세세한 실천사안들을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각종 분과위원회에서는 남북경협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남과 북에 도움이 되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